

보도해명자료 ('14.1.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, 신재생에너지 목표 11% 사실상 후퇴..
OECD중 꼴찌”(13.1.6, 한겨레신문)

1. 기사내용

-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15%도 가능하다고 건의하였으나 산업부가 11%로 최종 결정
-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여 정부의 정책의지가 흔들림
- '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(2.75%)은 OECD 기준으로는 0.7%에 불과한데 비재생폐기물 등을 포함하여 수치를 부풀리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신재생에너지 분과에서는 15%를 포함한 다양한 보급비중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11%를 권고하였음
- 신재생에너지 예산감소는 '12년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발전차액 지원제도(FIT)가 폐지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(RPS)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임

* 전력기반기금(FIT)에서 전기요금(RPS)으로 전환 지원

□ 신재생에너지 통계는 국가별로 자국의 특수성에 따라 상이함

- OECD 기준으로 신재생비중은 낮으나, 수력·풍력 등 신재생 부존 자원이 풍부하며, 개발 역사가 오래된 국가와 단순 비교는 무리

* 1위 : 아이슬란드(신재생중 지열 66%), 2위 : 뉴질랜드(지열 52%), 3위 : 노르웨이(수력 86%), 17위 : 독일(11.3%), 31위 : 일본(4.6%), 34위 : 한국(1.7%)

- 보급 증가율은 OECD(34개국) 12위의 중위권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투자시기는 늦으나 집중투자로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 추세

- 2차에너지기본계획(안)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대폭 확대될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증가에 노력중

* 태양광 : 1.02GW('12)→17.5GW('35), 풍력 : 0.46GW('12)→12.7GW('35)

※ 관련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강혁기 과장(044-203-5160)

장근무 팀장(044-203-5161)